

## ◇◇◇ 이치범 장관 ◇◇◇

### ‘재활용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통한 대책 추진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기자회와 환경부 실무과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도 업무보고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종으로 REACH제도를 홍보하는 이유,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및 재활용산업 육성방안, 이천 하이닉스 증설 관련, 수변구역 매수토지 관리방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아우르는 방안, 국장급 인사에 대하여 본부와 지방청을 고루 아우르는 방안,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계 개선방안, 올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대책, 바이오디젤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지면관계상 주요현황 사항중 몇가지만 발췌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의 경영악화로 방치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 방치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규제보다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봄. 폐기물재활용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성 방안과 폐기물재활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 폐기물처리업이나 재활용업의 경영악화로 수집된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면, 미관상 저해는 물론 흄날림이나 침출수 발생 등 2차 오염을 일으키므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재활용산업

의 경영악화에 의해 방치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중 발생된 방치폐기물 14건(31,061톤) 중 재활용산업에 의해 발생된 것이 11건(26,443톤)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그 동안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연간 700억원(2007년 650억원)을 1994년부터 융자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정부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지원방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재활용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84백만원)”를 통하여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대형화


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민간 재활용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재활용산업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 지원필요과제 93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일선현장의 국지적인 사항일 지라도 발굴된 지원필요과제를 철저하게 검토·반영하여 재활용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활용산업 경쟁력강화 협의회 구성·운영(2006년 6월~12월)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총 93건의 개선필요과제 발굴(2007.1)했다.

◆ 금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REACH 제도(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앞두고 정부차원에서 관련업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REACH 대응 추진기획단'을, 산자부에서는 'REACH 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관련된 업체가 환경부와 산자부 소속으로 나눠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양부 간에서 각각 REACH제도를 홍보하는 이유는.

 EU 구역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존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채택하여 EU내 사용(1톤/년 이상)되는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한 완제품(전자·섬유 등) 기업에게 60여 개 이상의 위해성 정보 등록 의무화하고 정해진 기한내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등록비용(총 1~2조) 등으로 대 EU 수출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EU의 REACH 대응지침에 따라, 산업계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을 추진 중이다.

EU는 회원국 화학물질관리 주무부서를 대응당국(Competent Authority: CA)을 지정하여 산업계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도록 한다. 대응당국에 국가도움센터(National Helpdesk)를 운영토록(REACH 법)하며 CA는 대부분 환경부(일부 복지부 지정)에서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6년 9월 "추진기획단" 및 도움

센터를 발족·운영하여 산업계 지원과 함께 국내 취약한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전략을 추진 중이며 다만, 산업계 지원을 환경부·산자부가 각기 추진함에 따라 산업계의 혼란·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도움센터를 중복운영 기관간 상이한 정보제공으로 산업계 혼선이 우려되므로, 산업계 전파 창구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산자부에서는 기업지원센터를 지난 1월 신규 설치했다.

이에 따라, "EU 지침"과 "국내부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대응요소별 관계부처 역할분담을 통해 범부처적인 대응을 추진 중이며 대응당국(CA) 역할을 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지원은 산자·환경부가, 인프라 구축 등은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범부처 종합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산자부는 산업계 지원 위한 장(場)마련(hardware), 환경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 생산·전파(software) 하고, 각 도움센터의 공동·연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가 4대강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토지매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들일 면적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가. 효율적인 매수 토지 관리 계획은.

 2015년까지 95km<sup>2</sup>(2,873만평)의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매수토지의 30km<sup>2</sup>(900만평)를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며, '06년말 현재 24.5km<sup>2</sup>(743만평)를 매수하였으며, 이중 0.9km<sup>2</sup>(26만평)를 녹지로 조성하였다.

수질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천 인근 토지 우선매수,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7년도에 수계별로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수계별 생태조사, 훼손된 수생태계에 대한 보전·복원 대책 수립, 토지매수 및 매수된 토지에 대한 보전·복원 우선순위 결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